

“병상에서도 의정활동 최선” 이원택 의원, 지역발전 견인

<더불어민주당>

SNS 통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 현장 대응 못해 지지층에 죄송”
신동진벼 퇴출 철회 · 새만금 농생명용지 신속 조성 등 막대한 역할 해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지난 두 달여 동안 입원상태에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올 국정감사 우수의원상과 모범의정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투혼’을 발휘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의원이 최근 폐 이스북을 통해 지난 2개월 동안 입원을 마무리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글을 올리면서 주변에 뒤늦게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 두 달간 병원에 있으면서 최소한의 국회의 당, 지역 구 활동을 수행했다”며 “지역구에 내려가서 민원과 현장 대응을 해야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 그지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중간에 전화 주시거나 그런 부분에 응대 못한 점 양해 바란다”며 “온전히 치료에 집중하다 보니 그랬다”는 말로 지인과 지지 층의 양해를 긴밀히 당부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해 작은 사고를 당해 목이 아프기 시작했지만 치료를 제대로 못하다가 계엄과 탄핵, 파면, 대선까지 집중

나서는 기백을 발휘해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원택 의원은 국정감사와 국회활동을 통해 무분별한 수입농정의 문제점들을 집중 부각하고 식량안보 강화 필요성을 짐짓 제기했다.

또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농협중앙회와 한국마사회 전북 이전 및 농촌진흥청 도내 이전을 강력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북의 대표적 쌀인 신동진벼를 윤석열 정부에서 보급중단한 것을 국회활동을 통해 집중 철회하는가 하면 새만금 농생명용지 신속 조성을 비롯한 지역발전에 도 막대한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이 의원은 올 상반기 중 군산시 대야면 4억원과 김제시 16억원, 부안군 15억원 등 총 35억원의 행안부 특별교부세 지원을 이끌어 내고도 지역 체장과 공무원이 벌풀을 판 결과라며 공을 공직사회에 돌리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권희성 기자

하다 병이 악화돼 치료하는데 시간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제3회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국회의원과 함께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 의원은 그동안 병원 신세를 지고 있음을 전혀 내색하지 않은데다 지난 12·3 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과 파면, 대선 과정에서도 몸이 아픈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국회 의정활동을 해왔다.

또 민주당 전북지부도당위원장의 종책을 맡아 대선 과정에서 각급 기관을 직접 방문하고 현장 소통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 도민과 함께 이겨낸 성과”

민주 도당, 도민께 감사의 뜻 전해… “새만금 개발 속도 끌어올릴 중대한 전환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윤준병)은 지난 21일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 사태를 도민과 함께 극복하고 마침내 고속도로를 완성했다”며 전북도민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 사태를 통해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은 새만금 개발사업의 속도를 한 단계 끌어올릴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기업 유치, 물류 효율성 향상, 관광 활성화 등 전북 발전 전반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특히 이번 개통이 “전북도민에게 매우 특별한

속도로는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성취”이며 “앞으로도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미개통 구간 연결,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국제공항 등 핵심 인프라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영선 도의원은 이달 14일 자로 민주당 신임 수석대변인으로 임명됐다.

21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수석대변인 임명 소식을 전한 윤 의원은 “도민과 당의 가교가 되어 전북특별자치도의 대도약에 힘을 보태고 싶다”며 각별한 각오를 밝혔다.

전임 수석대변인인 김술지 도의원은 정청래 국회의원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되며 새로운 역할을 시작했다.

/이민호 기자

“학교 통폐합, 속도보다는 머무를 조건이 우선”

윤영숙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영숙 의원(익산3·교육위원회)은 지난 21일 제423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전북교육청의 학교 통폐합 정책이 지역 소멸과 교육공무직 고용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학교는 지역 공동체의 심장”이라며 “통폐합의 속도가 지역 주민의 삶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6년 3월 8개교 통합 확정, 2029년까지 전교생 9명 이하 ‘주주 작은 학교’가 67개교로 늘어날 전망 등을 제시하며 지역 소멸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돌봄전담사·시설관리직 등 학교장 채용 직종의 경우 인사 교류가

불가능해 통폐합 시 과원이 발생해도 재배치가 어려운 구조적 고용 위기를 앓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학교장 채용 직종 인력 관리 체계 개편 △소규모 학교의 매력을 높이는 ‘머무를 조건’ 마련 △폐교의 지역 공동체 거점 활용 및 주민 참여 강화 등 세 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가장 취약한 인력과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이 교육청의 책무”라며 교육청의 신중하고 투명한 정책 추진을 거듭 요구했다. /이민호 기자

“자임추모공원 사태, 전북도·전주시가 적극 대책 마련을”

김정수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자체법률)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임추모공원 사태와 관련, 유가족들의 추모권 보장과 전북도·전주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가족의 추모권은 행정의 자비가 아니라 엄연한 권리”라며 “고인을 두 번 울리지 않는 도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임추모공원은 지난해 6월 봉안당 시설 8개 호가 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변경되면서 시설 소유주와 유물함 관리 주체가 분리됐고, 그 과정에서 출입 제한과 추모 시간 단축이 발생해 유가족 민원이 본격화됐다. 현재 추모

기간 시간은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8시간)에서 오전 10시~오후 1시, 오후 2시 30분~4시까지 줄어 하루 4시간 30분 만 운영되고 있으며, 봉안당 규모는 6,155기, 이 중 1,802기의 유골이 회수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임추모공원 유가족들은 “피해보상도 바라지 않는다. 그저 유골만 안전하게 지키려”며 상여를 메고 전북도정에서 전주시청까지 약 5.1km를 행진하는 상여 시위를 벌였다. 유가족들은 도청 앞 집회에서 “전북도와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호소하며, 고인의 유골을 안전하게 모실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과 정상적인 추모 환경을 요구했다.

이에, 김 의원이 제안한 첫 번째 대책은 정사법과 관련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임추모공원에 대한 ‘임시관리자 지정’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전주시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강력한 행정지도로 출입 제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로 김 의원은 전기요금 체납, 냉난방과 청결 상태 등 기본적인 관리가 흐물림 경우 시설 안전 문제가 곧바로 유족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지원·후정산’ 방식의 비상 안전조치를 즉시 가동할 것을 요구했다. /이민호 기자

“좌절 강요 귀농·귀촌 정책, 대대적인 제도 개선 필요”

윤정훈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정훈 의원(무주)은 지난 21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귀농·귀촌을 장려한다는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이 실제로는 귀농인의 손발을 묶어 좌절을 강요하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며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무주로 귀농한 시민 A씨가 농지 구입을 위해 1억 원을 신청했을 때도 농협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4,500만원밖에 대출할 수 없다고 통보한 사례를 언급하며, “실거래가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시지가가

대출의 기준이 되는 것은, 행정이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귀농 준비비를 1년 넘게 치밀하게 해온 시민이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무책임한 안내와 ‘왜 공시지가가 기준인지 모르겠다’는 행정의 무감각 앞에서 결국 귀농 자체를 포기할지 고민하는 상황”이라며 “이것이 전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

다. 윤 의원은 정책의 구조적 한계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첫째, 귀농 농업창업 자금의 경직된 상황 구조를 문제로 지적했다.

둘째, 정착을 위한 정책자금이 각종

보조사업에서 자부담으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를 짚었다.

셋째, 시설 지원사업의 ‘선시공 후대출’ 방식에 대해서도 ‘비효율적 규정’ 때문에 귀농인만 부담이 늘고 시공업 체만 유리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통계 역시 심각한 위기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호 기자

“대상포진 예방접종 도비 지원 확대·정부 제도적 이행을”

최형열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1)은 지난 21일 제423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한 도비 지원 필요성과 정부의 제도적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최근 6년간 대상포진 누적 환자가 356만 명에 달하고, 지난해에도 76만 2천여 명이 발생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예방접종이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백신 종류에 따라 7만 4,700원에서 42만 원까지 비용이 발생하지만, 고가의 접종비 때문에 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층 등 취약계층은 사실상 예방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과거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65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무료 접종’이 여전히 이행되지 않은 점을 강력히 비판하며 현정부에서도 “전파성 질환” 아니라 “이유”와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제도화를 미루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도내 14개 시군은 지역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대상포진 접종을 지원하고 있지만, 시군비 100% 부담 구조로 인해 지역별 지원 기준이 크게 차이가 난다. /이민호 기자

민주 도당 “도영스님의 가르침 잊지 않겠다”

공식 추모 메시지 발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윤준병)은 지난 21일 공식 추모 메시지를 발표하고 “도영스님의 가르침과 자비행을 잊지 않겠다”며 “극락왕생하시기를 삼가 추모드린다”고 밝혔다.

도당은 “대한민국의 원로이자 불교계의 큰 스승이신 도영스님께서 적멸에 드셨다는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스님께서는 한생생 활과 상생의 길을 살피하며 전북의 정신을 드높여 오셨다”고 전했다.

이어 “전북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깊이 있게 성찰해 전통을 보존·계승

하셨으며,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늘 함께하며 자비를 실천하셨다”며 스님의 삶을 기렸다.

특히 도당은 “도영스님의 가르침과 자비행을 잊지 않겠다”며 “극락왕생하시기를 삼가 추모드린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도영스님의 가르침과 자비행이 전북 곳곳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당원과 도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겠다”며 “스님의 무량한 공덕이 세상에 회향되기를 바라며, 부디 극락왕생하시기를 삼가 추모한다”고 다시 한 번 애도의 뜻을 표했다.

/이민호 기자

도, 미래농업 전북 포럼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1일 순창군 군립도서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2025 미래농업 전북포럼을 열고, 내년 시행될 시범사업의 방향성과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순창군이 사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 설계와 실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전북농어업·농어촌위원회와 전북연구원이 공동 주관했으며, 도·시군 관계자, 전문가, 순창군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포럼은 전북농어업·농어촌위원회와 전북연구원이 공동 주관했으며, 도·시군 관계자, 전문가, 순창군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민호 기자